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2
----------	------

발의연월일 : 2024. 7. 2.

발 의 자 : 한병도 · 박지원 · 박 정
김영배 · 윤준병 · 임호선
이기현 · 서영교 · 이광희
황운하 · 이해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12조에 따른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과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세부 검토 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①</u>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u> <u>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u> <u>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u> <u>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u> <u>하여야 한다.</u></p> <p>1. <u>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u> <u>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u> <u>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u> <u>항</u></p> <p>2. <u>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u> <u>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u></p> <p>3. <u>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u> <u>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u> <u>사항</u></p> <p><u>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u> <u>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u> <u>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u> <u>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u> <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u> <u>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u></p>

법령안이 제11조에 따른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 제12조에 따른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과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세부 검토 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